

# 고객볼모 성과급 요구… 국민銀 노조, 결국 ‘파업’ 자충수

&lt;5차례&gt;

## KB노조, 내일 19년만에 총파업 예고

최우선 협상조건 ‘성과급 300%’ 경영진 54명 은행장에 사직서

‘협상 안한다’ 노조의 주장에 사측 “사실 왜곡 언론플레이”

KB국민은행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8일을 무사히 지나간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하루 만의 경고 파업이 아닌 고객을 볼모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파업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내내 파업을 반복할 계획을 세웠음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 타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피해는 고객들의 몫이다. 반면 구조조정 등 생존문제가 아닌 성과급이 이번 협상의 쟁점인 만큼 고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명분은 약한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8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2차 총파업은 1월 30일과 2일에 걸쳐 이를간, 3차 총파업은 2월 26일부터 28일 까지 사흘간으로 기간도 더 길게 잡았다. 4차, 5차 총파업은 각각 3월 21~22일, 3월 27~29일로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은행 업무가 몰릴 시기인 다음달 설연휴를 포함한 두 차례의 집단휴가와 2, 3월 두 달간 회의참가부나 계열사 상품판매 거부 등 태업도 예고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가 임단협을 빌미로 해 고객과 직원을 볼모로 극단적 파국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1년 중 가장 바쁜 설 명절 전후부터 3월 말까지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하는 시리즈 파업이 현실화되면 은행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극단적인 총파업 예고에 경영진은 종사자로 배수진을 쳤다.

KB국민은행 전 경영진은 오는 8일 파업으로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행장, 전무, 상무, 본부장, 지역영업 그룹 대표 등 경영진 54명은 지난 4일 오후 허인 은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번 노사갈등의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우선 협상조건은 성과급 300%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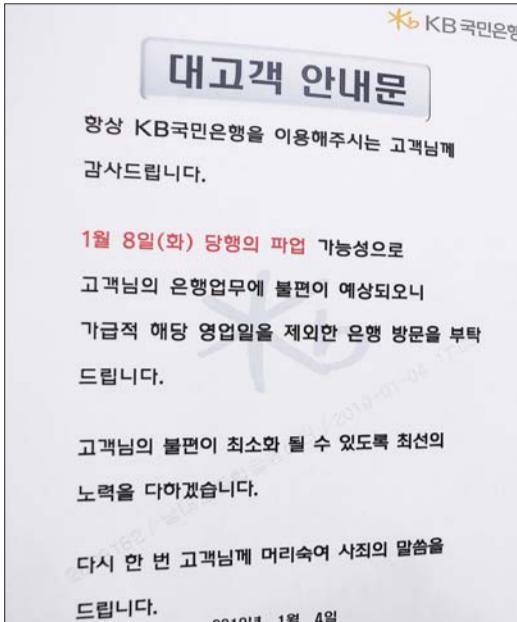
사측은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당초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하자는 제안을 접고, 성과급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노조의 요구와는 괴리가 크다.

KB국민은행 경영진 측은 “고객의 실망과 외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조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상식과 원칙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노조의 반복적인 관행과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종사퇴 방침을 밝혔다.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파업에 대해 경영진은 책임을 지는데 직원과 노조는 무책임하게 강행한다는 인식을 심는 책임 전가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산업노조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지부 관계자는 “노조를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노동자 간 차별 철폐 문제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지점에 오는 8일 국민은행 파업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에도 은행장과 노조 위원장이 면담을 가졌고, 4일과 5일에 경영지원그룹 대표가 노조 수석부 위원장과 만남을 이어갔다”며 “은행이 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말인 6일도 국민은행 경영진과 노조 측이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미 기자 smahn@metroseoul.co.kr

## 삼성전자, 4분기 어닝쇼크? 10% 급감 예상

증권가, 전망치 평균 13조5394억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유

최근 2년여 동안 이어진 삼성전자의 장밋빛 실적이 잿빛으로 바뀌었다.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국경제 전체에 충격파가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4분기 전망치 평균값은 13조5394억원까지 조정됐다. 이 수치는 2017년 4·4분기 실제 영업이익(15조1500억원)보다 10.6% 감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13조 원을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키움증권(14조3000억원)이며 가장 낮게 제시한 곳은 하이투자증권(12조2000억원)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7년 17.1%에서 지난

지난해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 성적이 기대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에 금이 가면서 길게는 올해 상반기 까지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지난 2017년 1분기(9조9000억 원) 이후 7분기 만이다.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1.6%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1월(53.3%)의 5분의 1 수준이다. 원인은 단가 하락으로 분석된다. DRAM 현물가격(DR4 4GB)과 NAND 현물가격(MLC 64GB)은 올 1월 각각 4.9달러, 4.03달러에서 지난달 3.35달러(-36.1%), 2.9달러(-28.0%)로 크게 떨어졌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7년 17.1%에서 지난해 11월까지 21.1%로 더 높아졌다. 반도체 수출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전체 수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시장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 속에 삼성전자 실적이 상반기 바닥을 친 뒤 다시 상승 기류를 탈 것이란 낙관론도 나온다.

황고운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인텔이 신규 CPU를 출시하면서 서버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분기 전후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 가능성이 있어 올 2분기께 업황 개선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는 구조적인 장기 하락세라기보다 단기적인 재고 조정일 가능성 이 아직 높다”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

## 고가주택 공시가격 최대 3배 인상

국토부, 저가·지방주택 인상폭 낮아 마용성 일부지역 상승률 200% 달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기일이 이달 7일 종료되는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새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해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 저가 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낮아 지역별, 가격 대별 인상 편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진 것과 달리, 단독주택은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특히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서울의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못 미쳐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건물과 땅값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 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고려해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도 급등 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는 역대급 상승이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이라도 일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떨어져도 땅값이 오른 지역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법률적 정비로 자영업자 부담 덜어야줘야”

» 1면 ‘배달에 울고웃는…’서 계속

즉시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배달앱에 외부결제 수수료 3.3%를 내야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이유다.

자영업자 민모씨는 “배달앱을 통한 즉시 결제가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결제로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요즘은 즉시결제나, 수수료가 높은 업체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달앱 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스러워도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어서 배달앱을 무작정 외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앱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업체의 70%는 브랜드가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우리는 기존에 낭비되어왔던 비효율적인 전단지 광고비를 낮춰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